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I.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의 필요성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각 산·학 및 정부부처에서는 통일 대비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비용은 45년간 연평균 약 231.6조원으로 추산되나¹⁾,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²⁾ 통일 편익과 관련하여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3조 9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한국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³⁾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저성장기조(Great Moderation)로 전환된 우리나라의 경제경기 부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GDP의 15.1%, 취업자의 7.0%를 차지하는 국가 중추 산업이나 '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어 있어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7년 22.1%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로 급락하였다. 또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997년 109조에서 2012년 기준으로 73조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최근 100대 건설기업의 연이은 기업회생절차 및 워크아웃은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일은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모멘텀(momentum)이 될 수 있다.

다만, 독일 통일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준비되지 않은 통일

은 많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바, 통일을 대비한 경제협력 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건설협력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건설·개발사업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의 광산 채굴권 및 개발권 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 또한, 향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지역 SOC 투자 및 경제 재건 비용 역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에 따른 건설비용 감소, 자원외교 차원에서 북한 광물자원의 보호, 북한 건설 수요증가에 따른 시장의 선점, 우리나라의 건설경기 침체 대항 활로 모색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조속한 남·북한 건설협력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II.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추진 방안

1.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대북 건설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⁵⁾”을 들 수 있다(법 제2조 제3호).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필요시 남북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

1) 국회예산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2014, 130쪽.

2) 홍순직·이해정, “HRI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관계 긴장 지속”,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2011.11.17

3) 홍순직, “통일은 왜 필요한가?”, 2014년 제1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15쪽.

4) 2009년부터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무연탄의 경우 2011년에는 전년대비 140% 급증하였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무산 광산을 중심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주요광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발간자료(Open Source Center)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기업은 총 89개 북한 지하자원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이중 중국이 약 80개 사업에 진출하였다: 북한자원연구소, “북한 지하자원개발 법제 연구”, 통일부, 2013, 39쪽.

5)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⁶⁾ 개성공단⁷⁾의 경우 남북협력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파생법률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총 66.1km²(2,000만평) 규모로 공장 구역 26.4km²(800만평)과 배후 도시 9.7km²(1,200만평)로 구성되어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5·24”조치가 발동되어 협력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개성공업지구는 현재 1단계 사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북교류에 있어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남·북 건설협력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2. 북한 건설 수요 분석

북한 내 건설수요는 크게 국가연계형 SOC 수요와 주민연계형 SOC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국가연계형 SOC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1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상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한 이후 최근에는 「경제개발구법」상 각 지역의 경제특구로 변천하였다.⁷⁾

이러한 북한의 산업단지 관련 개방 정책은 국제사회의 경제 봉쇄정책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이지만, 산업단지 개발 관련 주택, 도로, 철도 등 국가연계형 SOC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개시설 사업 등 농업 분야에 있어 건설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⁸⁾

두번째로 주민연계형 SOC 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매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겪고 있는바, 재해복구 및 시설 정비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내 주민과 밀접한 많은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 구조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 밖에 지역거점 교육·의료시설, 오페수, 하수처리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건설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3.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의 추진 방향

2010년 발동된 이른바 “5·24” 조치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바,⁹⁾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통일 준비를 위하여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향후 “5·24”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본래의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2·3단계 개발을 위한 건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외에 「경제개발구법」상 각 지역의 맞춤형 개발, 신규 남·북한 공동 협력사업 개발·추진 및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동북아 거점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이 경우 역시 많은 건설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각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국가연계형 SOC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산업단지 개발 및 국가연계형 SOC 개발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봉쇄정책 타개를 위하여 경제특구 등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폐쇄적 집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연계형 SOC 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건설협력사업은 사업비 조성이 선결되어야 하는바,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또는 대북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

표 1. 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개발 계획

1단계 (공단: 3.3km ²)	2단계 (공단: 5km ² , 배후도시: 3.3km ²)	3단계 (공단: 11.6km ² , 배후도시: 6.6km ²)
봉제·신발·가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 중심 공단	기술·전기·전자 등 기술집약적 공단	IT·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복합공업단지
중소기업 우선 분양, 중소기업 활로 개척	산업구조 조정, 수도권 연계 개발	해외 유명기업 및 대기업 유치
남북경협 기반 구축	세계적 수출기지 육성	동북아 거점 개발

※ 별도 계획 : 개성시 13.2km², 황장 구역 23.1km²(공단 6.6km² 포함)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www.kidmac.com)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시행되고 있다.

7) 북한은 2014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통해 13개 특별시·도와 220개 시군 주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비교적 소규모의 자체 개발구를 추진하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각 경제지구·특구 관련 현황은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8)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2011년 북한의 농지면적은 255만ha이고, 그중 경작지면적은 230ha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지 중 관개시설이 설치되어 혜택을 받는 면적은 57%인 146만ha로 추정하고 있다.

9) 임성택,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경제 제35권, 현대경제연구원, 2012, 58쪽.

지 않을 수 없다.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소수의 의견 또한 무시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 방향으로는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와 함께 주민연계형 SOC 분야에 대한 건설협력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장기적 방향으로 경제성과 더불어 향후 통일 이 후를 고려한 국가연계형 SOC 개발 및 건설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II. 남·북한 건설협력사업비 조성방안

1. 남북협력기금 운영현황

북한의 건설사업 진출은 일반적인 해외진출과는 달리 북한 정부나 단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진출이 불가하고 정부 간 협의된 협력사업에 국한하여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재원 역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운영가능한 남북건설협력사업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유일한 창구로 볼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91년에 정부의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상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등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12조 3천여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정부출연금과 공자기금예수금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등	총조성액
합계	4,708,100	2,4840	6,703,774	911,044	12,325,402
비중	38.2%	0.0%	54.4%	7.4%	100.0%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자료

한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2010년 천안함사건 이후 2013년을 제외하고 5%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이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집행계획은 2011년 1조 3천억 원으로 40% 가까이 삭감되었으며, 실질적인 집행금액도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동향

(단위: 백만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출계획	2,227,885	1,376,837	1,613,775	1,825,089	1,597,314
집행액	86,250	42,683	69,376	295,783	87,578
집행률	3.9%	3.1%	4.3%	16.2%	5.5%

참조: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자료

또한 5년간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역경협보험으로 최근 집행액 중 가장 높은 비중(181,573백만원, 31.2%)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역경협자금대출(141,890백만원, 24.4%), 경협기반조성(무상)(119,300백만원, 20.5%)이 차지하고 있어 보험이나 용자 등의 사업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남북협력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금융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며, 운영중인 사업의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통일기반조성 및 경제협력기반 조성 등 건설관련 사업예산의 지출은 2014년을 기점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및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존의 개성공단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직접적인 사업의 규모는 200억 수준으로 향후 발생할 통일비용을 고려한다면 기반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 건설협력사업비 조성방안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45년간 1경 428억 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1.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북한의 산업개발 및 SOC 등의 투자성 비용은 769.6조원으로 연평균 26.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SOC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자금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적원조와 자본 그리고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재원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만약 통일비용을 통일 이후부터 지출하게 되면 정부재정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원활한 통일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SOC 사업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조달방안은 현재 운용중인 남북협력기금의 체계적인 운용과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운용중인 사업비 내에 남북경제협력내에

경험기반사업의 확대와 별도의 SOC 사업계정을 신설하여 북한건설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험기반조성사업(무상) 계정의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총 204억 규모로 개성공단에 179억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경험기반 사업에는 25억 지출에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회 활동과 기금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즉 개성공단 이외의 SOC투자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험기반조성 계정 또는 통일기반조성 계정등을 포괄하는 별도의 SOC계정을 신설하고 건설협력 아이템의 발굴 및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남한정부의 지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과의 유상 거래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도 확대해야 하나, 여기에는 사업모델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북한은 달러가 부족하고 북한의 원화는 외환으로서의 교역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외환으로 인한 거래가 아닌 다른 방식의 대가 지급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현물거래의 무역형태인 바터무역(barter trade)¹⁰⁾ 즉 물물교환의 형태로 사업모델을 진행하게 된다면 건설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천연자원은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품질과 매장량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자원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광석(HS코드 26) 및 철강(HS코드 72), 광물성연료(HS코드 27), 마그네사이트(HS코드 25)등을 20억 달러(한화 2조 1,000억원) 수출하고 있다. 반대로 남한의 경우는 광물성 연료(HS코드 27), 철광석(HS코드 26) 및 철강(HS코드 72)이 각각 품목별 수입의 1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2,170억 달러 수준(한화 약230조)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현금으로 전환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북한 내의 SOC건설에 대한 대가를 남한 정부에게 광물자원과 광물공동채굴권 등을 제공하고 남한정부는 경험기금과 광물자원 매각을 통해 마련한 기금을 국내 시공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으로 건설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정부와 남한정부가 북한 내에 필요한 SOC건설과 이에 대한 대가를 광물자원으로 대물 지급할 것을 협의하고, 북한정부가 요구하는 SOC를 남한의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남한정부가 경험기금과 광물자원 판매에 따른 수익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통일비용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정부가 마련해야 할 채무이며, 북한의 SOC를 구축하는 건설협력사업은 통일비용의 절감은 물론, 북한 건설시장의 선점과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은 우선 개성공업지구의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 방향으로는 주민 연계형 SOC 개발 및 건설협력사업, 장기적 방향으로는 각 경제특구·산업단지개발과 함께 국가연계형 SOC에 대한 건설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확대 및 남북협력 SOC사업 계정 신설방안 도입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하다. 특히 국가연계형 SOC에 대한 건설협력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은 북한정부가 필요한 SOC 건설에 대한 대가로 광물자원의 대물지급을 남한정부에게 협의하고 남한정부는 경험기금과 광물자원 수익으로 남한의 시공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2014
 박용석,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건설이슈포커스 2014.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북한자원연구소, “북한 지하자원개발 법적 연구”, 통일부, 2013
 임성택,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경제 제35권 현대경제연구원, 2012
 KOTRA(2014) 「2013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2012년~2014년 각년도
 홍순직, “통일은 왜 필요한가?”, 2014년 제1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홍순직·이해정, “HR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관계 긴장 지속”,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2011
 한국무역협회(2014), 「한국무역통계」

10) 바터무역(barter trade): 구상무역이라고도 하며, 금전의 수수가 없는 물물교환경제를 지칭하는 무역용어.

※ 부록: 북한 경제 지구·특구 개발현황¹⁾

표 1. 북한의 5대 경제특구 현황

구분	나선(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위치	함경북도	평양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면적	약 470km ²	132km ²	66km ²	약 100km ²	황금평 : 16.0km ² , 위화도 : 12.2km ²
지정일	1991. 12 특수경제지구 2010. 1	2002. 9 특수경제지구 2013. 11	2002. 11	2002. 11	2010
유형	경제무역지구	홍공식 특별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경제무역지구
관련 법	라선경제무역 지대법	과거 : 신의주특별 행정구기본법 현재 : 경제개발구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주요 기능	첨단 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 제조업, 무역 및 중계 수송, 수출 가공, 금융, 서비스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 개발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 개발	국제 관광지	정보, 관광문화, 현대농업, 경공업
자치권	행정	입법, 행정, 사법 ¹⁾	독자적 지도·관리	독자적 지도·관리	행정
토지	소유주체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개발주체	개발업자	개발업자	개발업자	개발업자
	임차기간	50년	50년	50년	50년
사용 회폐	북한 원/외화	외화 ¹⁾	외화/신용카드	외화/신용카드	북한 원/외화
기업 소득세	면세/감면	특별행정구 결정)	일반업종 14% / 경공업, 첨단 10%	면세	면세/감면
비자 여부	무비자 (출입증명서)	비자 발급)	무비자 (출입증명서)	무비자 (출입증명서)	무비자 (출입증명서)

표 2. 북한이 외자 유치를 시도하는 13개 소규모 신설 개발구 현황

신설 개발구	지역	주력 사업	투자액/면적	입지 조건
외우도수출 가공구	남포직할시 외우도구역 영남리	수출지향형 가공조립	1억 달러 / 1.5km ²	남포항 인근,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60km, 풍부한 노동력
송림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리시 서송리	수출가공, 창고보관, 화물운송	8,000만 달러 / 2km ²	평탄한 논밭, 남포항에서 20km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군 평화리	유람과 탐승, 휴양, 체육, 오락	1억 4,000만 달러 / 8.1km ²	깊은 골짜기의 관광명소
압록강 경제개발구	신의주시 용운리, 어적리	농업, 관광휴양, 무역	2억 4,000만 달러 / 1.5km ²	중국의 국경, 철도역 등과 가까운 위치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미타리, 포상리	농업, 관광휴양, 무역	1억 2,000만 달러 / 3km ²	풍부한 압록강 수원, 발전소 인근 위치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위원군, 덕암리, 고성리	광물자원 및 목재, 농토산물 가공	1억 5,000만 달러 / 3km ²	입출국 통로와 수출입 물자 수송에 유리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군 용전리	농축산기지, 농업 과학연구단지 건설	7,000만 달러 / 4km ²	어랑비행장 인근의 평지, 농사에 적합한 환경
해산경제개발구	양강도 해산시 산장리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1억 달러 / 2km ²	삼수호와 내륙온천 인근, 해산비행장 인근
온성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외국인 대상 관광 개발	9,000만 달러 / 1.7km ²	중국 측에 있는 섬, 중국인 관광객 및 물자의 유출입 유리
청진경제개발구	청진시 송평구역 월포 리, 남석리, 수성동	금속 가공, 기계 제작, 건재 생산	2억 달러 / 5.4km ²	청진항, 김책제철소, 금속 가공, 청진화학발전소 인근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북청군 문동리, 부동리, 종산리	과수 및 과일종합 가공, 축산업	1억 달러 / 3km ²	북청사과 등 과수재배 적지, 북청원예단과대학 등에서 과수기술자 공급
홍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함흥시 덕풍동	보세 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 설비	1억 달러 / 2km ²	300만톤의 산적 집 처리 능력이 있는 홍남항 인근
현동공업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현동리	정보산업, 경공업	1억 달러 / 2km ²	원산 ~ 금강산 관광도로까지 4km, 갈마비행장까지 6km

표 3.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자금종류	'10	'11	'12	'13	'14	합계	
경상 사업	남북교류 협력지원	통일기반조성	-	-	-	-	23,631	23,631
		인적왕래지원	-	30	-	-	460	490
		사회문화협력지원	2,119	2,586	2,338	2,045	2,847	11,935
		교역경험보험	-	4,377	-	177,144	52	181,573
		소 계	2,119	6,993	2,338	179,189	26,990	217,629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1,987	95	440	2,078	3,083	7,683
		인도적지원	19,196	10,174	2,385	13,251	14,765	60,171
		경험기반조성(무상)	17,676	12,442	42,109	26,622	20,451	120,274
		소 계	38,859	22,711	44,934	41,951	38,299	188,128
	합 계	40,978	29,704	47,272	221,140	65,289	405,757	
응자 사업	인도적사업(응자)		-	-	-	-	0	
	남북교류 협력지원	교역경험자금대출	41,569	7,490	18,282	55,549	19,000	141,890
		-교역대출	31,243	5,761	14,885	-	2,983	54,882
		-경험대출	10,326	1,729	3,397	55,549	16,007	87,008
		경험기반조성(유상)	3,703	5,489	3,822	19,094	3,289	35,397
	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대출	-	-	-	-	-	0
	합 계	45,272	12,979	22,104	74,643	22,289	177,287	
총 계	86,250	42,683	69,376	295,783	87,578	583,044		

1) 박용석,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건설이슈포커스 2014.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104, 14, 25쪽 재인용.